

한국일보 

[단독] '김건희-구달' 만남 위해 급조된 생태교육관?... 23억 예산도 슬그머니

입력 2024.10.24. 오전 4:31

올해 개관한 용산어린이정원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 발표부터 개관식까지 김 여사 함께해
사용 허가 일주일 전인데도 '예정지' 발표부터
교육관 조성 예산은 뜬금없는 'K-BON' 항목에
이용우 의원 "영부인은 정책 권한 없는 민간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왼쪽) 여사가 지난해 7월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당 장소를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라고 발표했는데, 사업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와 관련해 국방부에 사용승인 요청을 한 것은 바로 전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제공

올해 6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개관한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간의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교육관 예정지'라는 계획부터 발표했고, 예산도 엉뚱한 곳에서 끌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6일 국방부에 용산어린이정원 내 국유재산(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날은 김 여사와 구달 박사의 만남 바로 전날이다.** 공문 취지는 미군 장군 관사였던 건물을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으로 조성하겠으니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이 기지로 사용한 부지를 일부 반환받아 조성한 공원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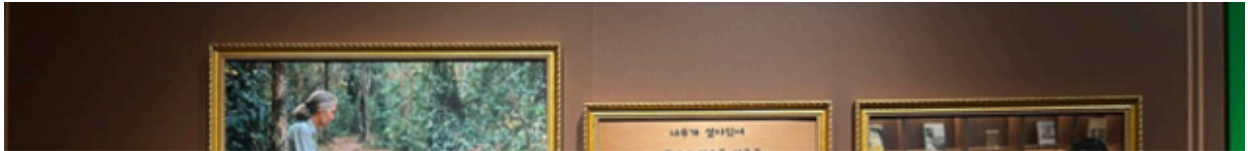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지난해 7월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산사나무로 기념식수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장소가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라고 밝혔는데, 당시 국방부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 제공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어린이정원에서 만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구달 박사가 어린이 환경·생태교육

관 예정지에서 산사나무 기념식수를 한 뒤 '개 식용 문화 종식' 등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사용승인이 나기도 전에 '교육관 예정지'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국방부 사용승인은 일주일 뒤인 14일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공간을 조성하려 한다"고 구달 박사에게 소개했다.

이용우 의원실에서 환경부 담당 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해 6월 말이다.** 이병화 당시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현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담당 국장이 구달 박사 방한과 관련해 김 여사와의 기념식수 행사, 식수 행사 장소 내 기념 사업 등에 대해 처음 논의했다고 한다. 또 담당 부서 실무진은 "과에서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 사업 진행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 내 사전계획 없이 김 여사와 구달 박사의 만남을 위해 급하게 사업이 추진된 상황인 셈이다.**



지난 6월 5일 개관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한쪽에 걸려 있는 제인 구달 박사와 김건희 여사의 사진.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정중앙에 걸려 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교육관 조성 예산도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운영'이라는 항목 아

래 올해 23억2,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본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소관 사업인 K-BON은 전문연구기관, 시민과학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생물종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사업으로, 보통 연간 3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다. 그런데 체험관을 어디에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23억여 원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다.

⑧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 운영
: (23) 376백만원 → (23요구) 2,681백만원, 2,305백만원 증액
- (요구) 시민과학과 함께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 운영하여 생물다양성을 관측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학자, 전문가, 청소년 등 시민을 대상으로한 시민과학 활성화와 과학적 검증 등을 통한 한반도 중 분포변화 예측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 K-BON(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 지구관측그룹(GEO) 산하의 생물다양성 관측 그룹(GEO-BON)내 국가 단위 시스템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 시민과학자 그룹과 협력하여 활동
- (산출)
• 시민참여 생물종 전국 모니터링: 187백만원(100인×1.9백만원)
* 시험연구비 132, 일반용역비 30, 국내여비 25
• 전국 모니터링 시민과학 데이터 검증·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 인력: 169백만원
* 상용임금(3인) 140, 복리후생비 2, 고용부담금 27
• 어린이·청소년 생물다양성 인식교육사업 : 2,325백만원
* 체험관 조성 1,400백만원×1식=1,400백만원, 시설 정비·운영 925백만원×1식=925백만원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변화 관측네트워크 운영'이라는 항목 아래 '어린이·청소년 생물다양성 인식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관 조성 및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
실 제공

4월 총선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맞물리며 한동안 공개 일정이 없었던 김 여사는 올해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열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을 찾아 7개월여 만에 비(非)외교 단독 일정에 복귀했다. 교육관 한쪽에는 김 여사와 구달 박사가 만난 사진이 걸렸다.



올해 6월 5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건희(가운데) 여사가 아이들과 환경 위기와 회복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해당 교육관 건립 사업의 주무 부처는 환경부이지만, 예정지 발표부터 개관식까지 김 여사가 함께했다. 대통령실 제공

환경부는 수도권 내 생태교육관이 인천에만 있어서 접근성 높은 용산에 교육관을 새로 건립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타 부처도 용산어린이정원에 각종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내년 어린이정원에 투입되는 예산만 환경부 등 6개 부처에서 736억 원에 달한다. K-BON 예산으로 교육관 건립 비용이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이 어린이·청소년이 포함된 시민들을 토대로 생물 다양성 프로그램을 홍보·교육하는 사업이고 (교육관 설립도)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우 의원은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해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에 불과한 영부인 행보에 의

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 시스템의 붕괴와 같다"고 지적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29425>
